연구 논단

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표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범수

1. 서론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징용으로 끌려간 약 200만 명의 조선인 가운데 상당수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 직후 연합군최고사령부가 마련한 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약 6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은 귀국 프로그램이 공식 종료된 1946년 12월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일본에 정착했다. 이 글은 이처럼 2차대전 이후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과 그 후손들(이하 '재일교포'로 호칭함)[1]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

김범수(金範洙)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Bringing Class Back In: The Changing Basis of Inequality and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Ethnic and Racial Studies* 31(5)(2008, pp.871~898),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Position of Zainichi Koreans: A Historical Overview,"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4(1)(2011, pp.233~245) 등이 있다. 2009년 『한국정치학회보』 43(1)에 게재한 「'국민'의 경계 설정: 전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1 2차대전 이후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과 이들의 후손을 지칭하는 용어는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한국

되었는지 1970년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2]

구체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기사 검색 서비스(http://newslibrary.naver.com)를 활용하여 1972년 10월 1일부터 1979년 10월 31일까지 '재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경향신문』 2,227건의 기사와 『동아일보』 2,082건의 기사를 검색하여 이 가운데 필자의 의견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설, 칼럼/논단, 기획/연재, 가십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또한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조선일보』 기사 검색 서비스(http://kiss.kstudy.com)를 활용하여 동일 기간 '재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 985건을 검색하여 사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재일교포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3] 〈표 1〉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연도별로 '재

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언 등 다양하다. 정진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호칭은 각각 다른 "역사성"과 "현재적 함의"를 갖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사회가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표상하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편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1950년대 초까지는 재일동포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재일교포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차대전 이후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들과 이들의 후손을 호칭하는 용어로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재일교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재일교포를 지칭하는 다양한 호칭의 역사성과 사용 빈도에 대해서는 정진성,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7호, 2012, 259~260쪽, 277~278쪽 참고.

2 이 글이 1970년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1970년대 초반 재일교포를 둘러싼 법·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5년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에 합의하며 부속협정으로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은 협정의 효력발생일(1966. 1. 16)로부터 5년 기간, 즉 1971년 1월 16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재일교포에게 일본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명시했다. 이에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약 60만 명의 재일교포 가운데 35만 1,955명이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나머지 약 25만 명의 재일교포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북한을 지지하는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34만 2,366명이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받았다. 이 결과 이들 영주권자 재일교포의 일본 내 법적 지위는 '무국적 거류자'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영주자'로 변화했다. 이 글은 이처럼 상당수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가 '영주자'로 변화한 이후, 즉 일시적으로 일본에 거류하다 언젠가 '조국'으로 되돌아올 '거류민'이 아니라 일본에 영주하는 '영주자'로 변화한 이후 한국사회에 표상된 재일교포의 이미지가 어떠했는지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이후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해서는 Kim Bumsoo, "From Exclusion to Inclusion? The Legal Treatment of 'Foreigners' in Contemporary Japan," *Immigrants and Minorities* 24(1), 2006, pp.55~63 참고.

3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은 세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이미지를 한국사회 전체의 이미지로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향신문』의 경우 박정희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으나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의해 1966년 소유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간 이후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 되었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친정부적 논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법이 갖는 한계는 명확하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위의 세 신문뿐 아니라 여타 언론 자료, 방송, 소설, 영화,

〈표 1〉 '재일'을 포함한 연도별 기사 검색 결과(1972~1979)

구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경향신문』*	275	192	294	304	524	289	188	119
『동아일보』*	291	195	324	273	396	240	190	97
『조선일보』***	87	97	139	131	312	141	62	25
계	653	484	757	708	1,232	670	440	241

주: *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검색 유형을 기사로 제한하여 검색.
** 각각 1972년과 197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기사 검색 결과.
*** 『조선일보』는 본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신문』, 『동아일보』와 달리 제목과 주제 검색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두 신문에 비해 검색한 기사의 총수가 적다.

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 가운데 이 시기 전매청장, 국세청장, 건설부 장관을 역임한 고재일 씨 관련 기사를 제외한 기사의 총수를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재일교포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과 뒤이어 1975년 9월 처음 시작하여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의 영향으로 재일교포 관련 기사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작동한 반공주의, 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4]의 프레임하에 재일교포가 "북한을 지지하는 간첩,"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돈의 생리를 따르는 배신자" 등 부정적 이미지의 '타자'(Others)로 표상되는 동시에

만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글은 지면의 제약으로 이 시기 한국사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그리고 현재 기사 검색 서비스를 통해 기사 검색이 가능한 위 세 신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제한적이긴 하나 이러한 분석이 당시 한국사회에 표상된 재일교포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줄 것으로 기대한다.

4 임현진과 송호근, 김세중, 김보현, 김동노 등의 연구는 박정희 정권 시기 반공주의, 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가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한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이 시기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작동한 반공주의, 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의 영향하에 재일교포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희 정권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로는 임현진·송호근, 「박정희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김세중, 「박정희의 통치이념과 민족주의」, 『한국현대사연구』 제8권, 1996;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2006; 김동노,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111호, 2010 등의 연구를 참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 국민"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표상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 이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조총련계 재일교포를 포섭하고 회유하기 위해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을 계기로 재일교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이념적·문화적·경제적 차이를 강조하며 이들을 타자화하고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exclusion)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혈연적 동일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적극 포섭(inclusion)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5]

재일교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한국사회가 재일교포를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하고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해왔음을 강조한다. 실례로 권혁태는 광복 이후 한국사회가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민족, 반공, 개발주의"라는 세 가지 필터를 통해 재일교포를 "한국말을 잘 못하는 반쪽발이, 총련 등에서 연상되는 빨갱이, 그리고 경제대국 일본의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졸부"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하며 배제해왔다고 주장한다.[6] 비슷한 맥락에서 조경희는 광복 이후 1970년대까지 한국사회가 재일교포를 "정치적인 이용 대상 혹은 경제적인 자원

5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복 이후 분단(1948)과 한국전쟁(1950~1953)을 거치며 남북한 간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재일교포 사회 또한 1940년대 후반부터, 특히 1955년 조총련이 결성된 이후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계와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계로 나뉘어 대립과 반목을 계속했다. 이러한 대립 구도에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총련이 재일교포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점차 민단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일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조총련을 이탈하여 민단에 등록했다. 영주권 신청 마감 기간인 1971년 1월 16일까지 전체 재일교포 60만 명의 약 60%에 달하는 35만 명이 대한민국 재외국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재일교포 사회 내부의 역학관계가 민단 우위로 돌아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재일교포 사회 내부의 역학관계가 민단 우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민단의 우위를 확고히 하고 조총련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1975년 추석을 기하여 주일공관과 민단의 주선으로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고향 방문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이 사업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자 정부는 1976년 3월 〈재일동포 모국방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재일교포 모국방문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동포방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2668(검색일: 2017. 6. 2).

6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가」, 『역사비평』 78호, 2007, 234~235쪽.

으로" 간주하고 "기민과 감시의 대상"으로 배제해왔다고 주장한다.[7] 또한 왕혜숙과 김준수는 한국사회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재일교포를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일본에 동화되기는커녕 차별을 받는 한민족," "한국사회의 보호가 절실한 한민족" 등의 긍정적 이미지로 표상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 일부 재일교포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회수함에 따라 점차 이들을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며, 위기가 왔을 때 당연히 일본 편에 설 사람들," "모국 발전을 위해 힘쓰는 건실한 기업가가 아니라 그저 투기와 이윤을 목적으로 한국에 사업 기회를 찾으러 온 해외자본,"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는 물론 마치 평화로운 농촌사회 한국을 침범하고 있는 해외자본"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하고 "전략적으로 무시"해왔다고 주장한다.[8]

이처럼 한국사회가 재일교포를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하고 배제해왔음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은 이 시기 재일교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재일교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단순히 이러한 배제의 측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김범수가 주로 1960년대에 초점을 맞춰 강조했듯이 박정희 정권 시기 재일교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혼혈아' 또는 '일본인'이 되어버린 2세와 3세 재일교포, '한국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매판' 재일교포, '조국을 배반'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계 재일교포를 타자화하고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포섭하는, 즉 배제와 포섭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9] 위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배제와 포섭이라는 두 측면 가운데 주로 배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시기 한국사회가 재일교포를 인식하고 표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 정치의 동학, 즉 한편으로는 배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섭하는 배제와 포섭의 중

7 조경희, 「한국사회의 '재일조선인' 인식」, 『황해문화』 57호, 2007, 46~48쪽.

8 왕혜숙·김준수, 「한국의 발전국가와 정체성의 정치: 박정희 시기 재일교포 기업인들의 민족주의 담론과 인정 투쟁」, 『경제와 사회』 제107호, 2015, 가을호, 261~262쪽, 278쪽.

9 김범수, 「박정희 정권 시기 '국민'의 경계와 재일교포: 5·16 쿠데타 이후 10월 유신 이전까지 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6집 2호, 2016, 163~206쪽.

첩적 동학을 드러내주는 데 한계가 있다.[10]

이에 이 글은 김범수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 시기에 초점을 맞춰 재일교포가 반공주의, 문화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 프레임을 통해 한편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는 간첩,"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돈의 생리를 따르는 배신자" 등 부정적 이미지의 '타자'로 표상되며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혈연민족주의 프레임을 통해 "한 핏줄을 나눈 우리 국민"으로 포섭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보여주고자 한다.[11]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기 정부의 재일교포 정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3절과 4절에서는 각각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단행한 이후 1975년 9월 13일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기간과 모국방문 사업 이후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 기간에 초점을 맞춰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재일교포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10 이 글은 민족주의를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칙"으로 정의하는 겔너(Ernest Gellner)의 정의에 근거하여 국가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 예를 들어 전쟁, 합병, 분할 등을 통해 국가의 경계를 재설정함으로써 국가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를 일치시키려는 시도, 또는 담론투쟁, 인정투쟁 등을 통해 특정 집단을 민족의 구성원으로 포섭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민족의 경계를 재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를 일치시키려는 시도 등을 모두 넓은 의미에서 민족주의 정치로 이해하고자 한다.

11 물론 이 시기 반공주의, 문화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 프레임이 배제의 기제로만 그리고 혈연민족주의 프레임이 포섭의 기제로만 작동한 것은 아니다. 실례로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계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타자화하며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한 반공주의 프레임은 동시에 북한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반공정책을 지지하는 민단계 재일교포를 포섭하기 위한 기제로 작동했다.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일본인이 되어버린 재일교포와 조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재일교포를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한 문화민족주의와 경제개발주의 프레임 또한 동시에 한국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재일교포와 조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일교포를 포섭하기 위한 기제로 작동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재일교포를 포섭하고 회유하기 위한 논리로 작동한 혈연민족주의 프레임 또한 동시에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재일교포를 배제하기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도 했다. 이 글은 이처럼 반공주의, 문화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 혈연민족주의 프레임이 갖는 이중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 이 시기 재일교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규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반공주의, 문화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 프레임은 포섭보다는 배제의 기제로, 반면 혈연민족주의 프레임은 배제보다는 포섭의 기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김범수, 「박정희 정권 시기 '국민'의 경계와 재일교포」, 167~168쪽 참고.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후 이 글의 함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박정희 정권 시기 정부의 재일교포 정책을 살펴보자.

2. 박정희 정권의 재일교포 정책

2차대전 이후 일본에 정착한 약 60만 명에 달하는 재일교포의 국적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1951년 10월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이 도쿄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1965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친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평화선 문제, 어업협정 문제 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승만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모든 한국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재일교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12] 그러나 이러한 공식 입장과 달리 실제에 있어 이승만 정권은 재일교포를 "친일파 아니면 공산주의자"로 간주하여 이들의 "귀국을 어렵게 하거나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며 "경원시"하는 등 사실상 "기민(棄民)정책"을 고수했다. 특히 1955년 5월 조총련이 결성되자 이승만 정권은 한동안 모든 재일교포의 한국 방문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13]

한편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재일교포의 국적과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재일교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이승만 정권의 입장을 계승했다. 실례로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국교정상화에 합의하며 부속협정으로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12 김범수, 「박정희 정권 시기 '국민'의 경계와 재일교포」, 171~172쪽.
13 김봉섭, 「한국 재외동포 정책 10년의 회고와 전망: 연구사 전개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37호, 2009, 8~9쪽.

관한 협정〉 서문에 재일교포의 국적과 관련하여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표현을 명기했고, 이후 재외국민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재일교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했다.[14] 특히 위 협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신청 마감일인 1971년 1월 16일까지 전체 약 60만 재일교포 가운데 약 35만의 재일교포가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반면 약 25만에 달하는 재일교포가 대한민국 국민 등록을 거부하고 1947년 5월 외국인등록령 시행 이래 계속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괴뢰정부라는 논리를 근거로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재일교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했다.[15]

이러한 입장에서 1972년 12월 19일 외무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통계는 1972년 12월 15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총 69만 4,343명의 재외국민 가운데 60만 1,814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6] 또한 외무부가 집계하여 발표한 1973년 재외국민 통계는 1973년 6월 말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총 80만 1,428명의 재외국민 가운데 61만 8,212명이,[17] 1974년 재외국민 통계는 1974년 6월 말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총 87만 1,405명의 재외국민 가운데 65만 3,568명이,[18] 1975년 재외국민 통계는 1975년 6월 말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98만 5,806명의 재외국민 가운데 64만 7,508명이,[19] 1977년 재외국민 통계는 1977년 6월 말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117만 1,290

14 김범수, 「박정희 정권 시기 '국민'의 경계와 재일교포」, 174쪽; 이성의 연구에 따르면 제6차 한일회담(1961. 10~1964. 4)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3년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공식 입장과 달리 재일교포, 특히 2세와 3세 재일교포의 일본 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일협정 본문에 재일교포 귀화권을 명문화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재일교포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될 수 없었고 귀화권과 관련된 논의는 1965년 이후 한일회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성, 「한일회담으로 보는 박정희 정권의 재일동포 정책: 귀화와 영주권을 중심으로」, 『사림』 제33호, 2009, 308~312쪽, 316~321쪽.

15 김범수, 「박정희 정권 시기 '국민'의 경계와 재일교포」, 175쪽.

16 「재외국민 694,343명 작년보다 31,814명 늘어」, 『동아일보』, 1972. 12. 19.

17 「재외국민 팔십만 명」, 『경향신문』, 1973. 12. 24.

18 「재외국민 모두 팔십칠만 천사백오 명」, 『경향신문』, 1975. 8. 8.

19 「재외국민 수 구십팔만 오천 팔백 명」, 『경향신문』, 1976. 1. 1.

명의 재외국민 가운데 65만 3천 명이[20]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등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재일교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정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재일교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함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은 실제 정책에서도 이승만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실례로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직후인 1961년 8월 재일교포 교육을 위해 교사 및 장학관 파견을 결정했고 1961년 10월 2일에는 외무부에 교민과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유공동포의 본국 초청, 교포의 모국방문 장려, 교민등록 실시, 교민단체 육성 보조, 재일민단 간부 육성 등 모국과 재일교포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21] 또한 1965년 6월 한일국교정상화에 합의한 이후에는 1969년 2월 13일 재외국민 지도·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관계부서의 업무 조정을 위해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일교포 실태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1969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재일교포 문제를 주제로 정부·민단 합동회의를 개최했고, 1970년 8월 17일에는 교민과를 확대한 영사국을 외무부에 설치했다.[22] 이후 1977년에는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기관 해외 설립, 교육 공무원 해외 파견, 예산 지원, 교재 공급 등 재일교포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23] 교육부 산하로 서울대학교 내에 재외국민교육원을 설립했고, 민단 중앙본부와 지방본부에 매년 10억 엔씩 지원하기 시작했다.[24]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룩한 경제성장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조총련계 재일교포를 회유하여 일본 내 조총련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1975년 9월 13일 추석 성묘단 방문을 시작으

20 「해외 거주 한국인 백십칠만 명」, 『경향신문』, 1977. 8. 8.
21 김봉섭, 「한국 재외동포정책 10년의 회고와 전망」, 12쪽.
22 이용재,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과정과 과제」, 『민족연구』 61권, 2015, 14쪽.
23 김봉섭, 「한국 재외동포정책 10년의 회고와 전망」, 18쪽.
24 이종훈, 「재외한인정책의 역사와 전개: 해방에서 참여정부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26쪽.

로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25] 제1차로 1975년 9월 13일부터 2주 일정으로 700여 명의 재일교포가 고국을 찾아 추석 성묘와 함께 현충사와 불국사 관광, 산업시설 시찰 등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1976년에는 설, 한식, 추석 등 명절 기간에 맞춰 만여 명 이상의 재일교포가 모국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후 1979년 추석 때까지 약 2만 5천여 명의 재일교포가 모국을 방문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 사업을 계기로 조총련계 재일교포에 대한 기존의 폐쇄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을 민단으로 전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했다.[26] 이하에서는 이처럼 박정희 정권이 이전 이승만 정권에 비해 좀 더 전향적인 재일교포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일교포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었는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 모국방문 사업 이전 재일교포의 표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합의에 따라 1971년부터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 일본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일본에 거주하던 약 60만 명의 재일교포 가운데 약 25만 명의 재일교포는 북한을 지지하는 등의 이유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25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귀국을 불허하던 정부가 1975년 이후 이들의 모국 방문을 적극 추진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1971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 간에 진행되어오던 적십자회담이 1973년 8월 반공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반공정책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북한 측 주장으로 결렬되자 정부는 한국의 국내법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둘째,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정부는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귀국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정부는 "북한을 시장천국으로 남한을 생지옥으로" 여기는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에게 조국의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회유하고자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동포방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26 국가기록원,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http://m.archives.go.kr/next/m/monthly/detail.do?page=1&designateYear=2008 &designateMonth=09(검색일: 2017. 5. 30).

그러나 재외국민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이 시기 모든 재일교포는 한국 신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한 겨레"로 표상되었다. 실례로 「일본과 재일교포」라는 제목의 1973년 6월 19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조총련계 학생들에 대한 일본 학생들의 습격 사건을 비판하면서 조총련계 동포를 포함한 60만 재일교포를 "우리 동포"로 호칭하고 있다. 그 사설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최근 일본 고쿠시칸대학(國士館大學) 및 동고교생들이 조총련계 학생을 습격, 이로 말미암아 각각 수명의 중경상자를 내게 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불상사다. 조총련은 우리와 사상을 달리하고 따라서 대립적 입장에 있는 단체이기는 하나 **같은 동포**라는 입장에서 불행한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일인들의 재일교포에 대한 모멸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는 바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 **우리 동포가 60만 토록**이나 일본에 살게 된 과거야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동포**가 일본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일본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27]

비슷한 맥락에서 「박종석 군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1974년 6월 10일자 『동아일보』 사설 또한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60만 재일교포를 "우리 동포"로 호칭하고 있다.[28]

27 이하에서 인용하는 신문 기사는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원문의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수정했으며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수정했다. 반면 철자법은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원문에 나온 철자대로 인용했다. 강조와 중략 표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필자가 강조하고 생략한 것임을 밝혀둔다.

28 박종석은 1951년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 2세로 1971년 일본의 유명 가전회사인 히다치사 입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자 입사가 취소되었다. 당시 히다치사는 박종석이 입사 지원 서류에 한국 본명 대신 "아라이 쇼지"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했고 본적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입했다는 이유로 그의 합격을 취소했다. 박종석은 그러나 히다치사가 박종석의 입사를 취소한 이유는 허위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1971년 요코하마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1974년 6월 19일 이 사건에 대해 히다치사가 박종석의 입사를 취소한 이유는 일본사회에 만연한 한국인에 대한 민족 차별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사회에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

일본 「히다치」 회사의 한국인 차별에 반대하여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용기를 보여준 재일동포 박종석 군이 「조국의 어머니」들에게 보내온 편지는 한일관계에 있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귀중한 교훈을 보여주었다. … **일본에 살고 있는 60만 우리 동포**가 일인들의 옹졸한 민족적 차별 속에서 고난과 울분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은 일찍부터 우리가 가슴아파하는 바다.

이처럼 '조선적' 재일교포를 포함한 모든 재일교포를 '우리'의 일원으로 표상하는 근거로 이 시기 언론에서는 일제강점기 이래 한국사회의 지배적 민족주의 담론인 "단군의 자손은 모두 한 핏줄의 한 민족"이라는 혈연민족주의 프레임이 활용되었다. 실례로 「재외국민과 조국」이라는 제목의 1974년 4월 20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재일교포가 우리와 "한 핏줄의 겨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핏줄의 겨레이기 때문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조국의 융성을 기원하며 모국의 정부나 국민은 한결같이 교포들이 뜻있게 잘살기를 바라 그 방편을 모색하며 꾸준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터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민정책의 얼」이라는 제목의 1975년 6월 5일자 『동아일보』 사설도 재외동포가 우리와 '한 핏줄'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핏줄기들에 대해 보다 원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수는 무려 2백만에 달하고 공산지역에 묶인 교포 1백만을 제외하고라도 1백여만의 우리 겨레가 모국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제 정부는 조국을 하루하루 잊어가고 있는 **우리의 핏줄기**들에 대해 보다 원대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존재함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일본사회에서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仲原良二, 『在日韓国 · 朝鮮人の就職差別と国籍条項』, 明石書店, 1993, 29~33쪽.

이 외에 「이세 교포의 모국방문」이라는 제목의 1973년 8월 1일자 『동아일보』 사설, 「조국을 배우는 교포학생들」이라는 제목의 1973년 8월 10일자 『경향신문』 사설, 「8 · 15 사건과 그 배경」이라는 제목의 1974년 9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 「누구를 위한 어두운 길이냐: 조찬환 씨의 용감한 행동에 따르라」는 제목의 1974년 5월 15일자 『경향신문』 사설 등도 "그들의 몸속에는 한국인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같은 피를 나눈 동족," "한국의 핏줄을 이어받은," "한국의 핏줄을 잇고 있으면서," "그들과 핏줄이 통하는 한국," "같은 핏줄의 한민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재일교포가 '우리'와 '한 핏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 재일교포가 민족주의, 특히 혈연을 강조하는 혈연민족주의 프레임하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원으로 표상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일교포가 동일한 범주로 표상된 것은 아니었다. 권혁태, 김범수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반공주의의 영향하에 조총련과 재일한국청년동맹(이하 한청)[29] 소속 재일교포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한(反韓) 파괴공작을 일삼는," "간첩," "테러리스트"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되며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30] 실례로 「북괴의 광적인 대남공세: 적극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라는 제목의 1974년 5월 6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조총련을 "북괴의 괴수 김일성의 지령을" 따르는 조직으로 표상하며 이들의 활동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북괴는 올 들어 대남적화통일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재일조총련 중앙본부 산하 13개국에 각각 「통일사업부」라는 것을 신설했다고 4일 내외

29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은 1960년 민단 산하 청년단체로 출범했으나 민단의 주류 · 비주류 분열 여파로 1972년 7월 민단에서 갈라져나와 반유신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정부와 언론은 한청이 조총련과 연계하여 "반한"(反韓) 활동을 일삼고 있다고 파악했으며 남베트남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한 베트콩의 이름을 빌려 종종 "베트콩파"로 호칭했다.

30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252~254쪽; 김범수, 「박정희 정권 시기 '국민'의 경계와 재일교포」, 197~200쪽.

통신이 보도하고 있다. … **조총련의 이와 같은 새로운 책동이 북괴의 괴수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 **조총련은 그동안에도 온갖 못된 짓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른바 「전기관적 전동포적 통일전선사업」을 전개, 민단계 교포의 분열 획책 등 **일본 내에서의 책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내에서의 사회교란과 거점 확보를 위한 침투공작을 일층 강화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한청 소속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이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한 활동을 일삼는" 조총련과 한청 소속 재일교포를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실례로 「재일반한단체 그 정체(상) 조총련 오사카(大阪) 본부」라는 제목의 1974년 8월 20일자 『경향신문』 기획 기사는 조총련을 "일본 정부조차도 건드리길 꺼리는," "북괴의 대일 중추 기지"로 규정하고 조총련을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으로 표상하고 있다. 또한 「재일반한단체 그 정체(중) 베트콩파 · 한청 · 한학동맹」이라는 제목의 1974년 8월 21일자 『경향신문』 기획 기사 또한 다음과 같이 한청과 조총련을 한 묶음으로 엮어 "극렬한 반한 활동"을 일삼는 집단으로 표상하고 있다.

60만 재일교포들은 3분화되어 있다. 대한민국 재일거류민단, 조총련,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의 집합체인 소위 **베트콩파**가 그것이다. **이번 박 대통령 저격 사건의 범인 문세광은 바로 베트콩파의 행동대인 한청의 간부였고 그를 뒤에서 조종한 배후는 조총련이다. 민족의 역사에 또 한 번 치욕을 기록한 이 끔찍한 범행을 자행한 베트콩파와 조총련**, 그들은 지금 일본 매스컴과 소위 좌익진보 세력의 비호와 일본 정부의 방관으로 활동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최근 에스컬레이션돼가고 있는 한일관계의 악화현상에는 **북괴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이 뒤에 도사리고 있고 표면에는 베트콩파가 극렬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좌파정치인과 진보적 지식인, 그리고 일본 매스컴이 측면 지원을 하며 여기에 일본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함수관계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 함

수관계가 사실이라면 **조총련은 적어도 일본사회에서는 경찰도 손을 댈 수 없는 성역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베트콩파는 어쩌면 그 성역에서 뻗쳐지는 불법적 마수에 놀아나고 있는 이용물인 것이다.**

이 외에 「일본 파괴집단과 반한조직」이라는 제목의 1975년 6월 4일자 『경향신문』 사설, 「오늘의 북한(14) 조총련의 마수」라는 제목의 1975년 7월 23일자 『경향신문』 기획 기사, 「조총련의 숙청 진행」이라는 제목의 1975년 7월 25일자 『동아일보』 사설 등 다수의 사설과 칼럼, 기획 기사가 조총련과 한청을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통일정책을 위한 선전과 대한(對韓) 파괴공작을 일삼는 단체," "테러리스트 조직" 등으로 표상하며 이들 단체에 소속된 재일교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간첩 마굴에서 벗어나라」(1973년 8월 8일자 『조선일보』 사설), 「위장 간첩의 자수」(1973년 8월 9일자 『동아일보』 사설), 「북괴 간첩 활동의 새 양상」(1974년 11월 6일자 『경향신문』 사설), 「북괴의 교활한 교란획책」(1975년 4월 2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북괴가 재일거류민단을 간첩 활동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총련과 한청뿐 아니라 민단 소속 재일교포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계와 한청 소속 재일교포들이 반공민족주의 프레임하에 '우리 국민'의 일원에서 배제되는 것과 더불어 한국말을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일본어와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등 "의식구조와 태도"가 "일본화"한 2세와 3세 재일교포 또한 이 시기 한국사회에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되며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실례로 「해외교포의 주체적 육성: 통일주체국민회의에의 재일교포 참여를 제언하면서」라는 제목의 1972년 11월 16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재일교포들에게 "무국적자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바야흐로 다시금 민족의 보금자리와 밀착하게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의식구조와 태도"가 "일본화"한 2세와 3세 재일교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으며 **재일교포는 무국적자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바야흐로 다시금 민족의 보금자리와 밀착하게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할 것이다. … 재일교포 1세와 2, 3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조국관의 차이는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2세, 3세는 조국의 언어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우수한 한국 두뇌가 일본으로 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다.** 또한 줄잡아 2조 엔 전후로 추산되고 있는 재일교포의 재산도 실인즉 일본 국적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그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재일교포 재산이 거의 일본으로 귀속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일교포의 일본화는 그 의식구조와 태도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에서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73년 6월 2일자 『동아일보』에 「한심한 교포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유종목이 투고한 글은 당시 재일교포 2세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한 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조국을 배우러 온 재일교포 남녀학생(재외국민연구소 생도)들이 요즘 나와 기거를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남녀 교포 학생들은 밤마다 한 방에 모여 밤이 깊도록 희희덕거리며 기타를 튕기고 일본 노래를 불러댄다.** 나의 충고쯤은 아랑곳없다. 그러나 그들은 방에서 **우리말 공부하는 경우를 거의 들은 적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들은 재일교포인 사실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것은 조국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유학 온 학생들의 태도가 아니다.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위 투고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1973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에 「교포학생은 열심히 공부한다 일부의 잘못 전체로 비난 말라」는 제목으로 당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재일교포 오정치가 투고한 글은 재일교포의 시선에서 재일교포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이 시기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잘 드러내준다.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그들은 재일교포인 사실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모양이다"고 투고자 유종목 씨는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모국을 찾아오는 교포들을 맞이하는 **모국 여러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제가 접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재일교포 = 억대부자」란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나 재일교포를 일본인 혹은 다른 민족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면 일본인의 이미지와 겹쳐서 처음부터 적대감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조국을 배우는 교포학생들」이라는 제목의 1973년 8월 10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말을 잘 못하는 재일교포를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하고 있다.

> 그런데 이 민박을 통해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학생 자신이나 맞아들인 가정이가 다 **그들이 국어에 익숙하지 못한데서 일어나는 장애**라는 것이다. 개중에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다.** …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먼저 이 학생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교포 1세, 2세들의 태만과 어쩌면 그 조국망각증에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식민지 실절이니, 빈곤과 무지이니를 탓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의 교포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3대, 4대를 외국에서 살아도 자기 국어는 물론 자기들의 전통적인 풍속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교포 선배들은 모국어를 가르치기는 고사하고 새로이 자식들의 이름조차 사는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본 떠 짓는 데 서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민족정신과 주체의식의 상실이 오늘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을 만든 것이다.**

또한 1975년 5월 1일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란에 실린 가십 기사도 다음과 같이 이 시기 한국사회가 우리말을 잘 못하는 재일교포를 어떻게 대

했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다.

> 김포공항은 서울의 창문인 동시에 한국의 창문임을 자랑한다. 한데 지난 4월 11일 여기 김포공항에서 벌어진 한 토막의 사연을 적어보련다. 나이 70을 갓 넘은 한 노인은 **분명 한국인이지만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고 일본말만을 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는 또 문자를 해득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으레 입국수속을 밟아야 할 때는 입국신고나 휴대품 신고와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야 할 터이지만 그의 무식은 이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정도였던가 보다. 그 노인과 법무부 및 세관원 사이에는 옆에서 듣기에도 거북한 말이 오고 갈뿐만 아니라 불쾌하기 짝이 없는 장면마저도 벌어지고 말았다. "**한국 사람이면서 왜 우리말도 몰라** …" "왜 이 종이에는 기입할 것이 많은데도 아무것도 써넣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야 …" 경어는커녕 반말이 오고가는 형편이다. … 이러한 정경은 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포공항에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한편 박정희 정권 시기 정권의 통치 이념으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제개발주의 또한 이 시기 재일교포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경제개발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에게 '조국의 경제발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지원하에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윤성방적과 방림방적을 창업한 재일교포 실업인 서갑호가 1970년대 들어 오일쇼크 등으로 일본에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원금을 회수하려 하자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당시 언론에 널리 회자되었다. 실례로 「보따리 챙겨 떠나겠다는 두 얼굴을 가진 기업불륜 한국인 서갑호인가 일인 사까모토인가」라는 제목의 1974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투자 회수를 결정한 서갑호를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모국 경제건설의 일역을 담당한다던 재일교포 재벌이 모국에다 대고 "달면 삼

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의 논리를 들고나왔다. 외자가 몹시도 귀하던 때 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거액의 돈을 들여다 방림방적과 윤성방적을 세웠던 서갑호 씨.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던 그가 이제 일본 내 모그룹의 재정 형편 악화를 이유로 대한투자액을 회수, 보따리를 챙겨 훌훌 떠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돈의 생리·서씨 면모 과시

그는 한국인 서갑호인가, 아니면 일본인 「사까모또(阪本)」인가. 이 시점에서 그는 일본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돈의 생리**가 본색을 드러냈을 뿐이다. 그리고 서씨 개인이 지닌 야누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한 데 불과하다. … 그러나 한국인 서갑호 씨, 일본인 「사까모또」 씨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재력을 지닌 재일교포 재벌로서 모국 경제건설을 돕기 위해 투자했다던 서씨였다. …

투자 회수는 민족적 배신

돈의 생리가 냉혹한 이상 서씨에게서 기업인의 윤리까지 물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국에의 기여를 다짐했던 그의 언동은 치부를 위한 가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따라서 **투자 회수는 민족적 배신행위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1974년 한 해를 마감하며 1년간의 경제 관련 소식을 정리한 「'인상'으로 시작해서 '인상'으로 마감한 한해 74년 경제일지」라는 제목의 1974년 12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도 서갑호의 투자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74년의 경제사건 가운데 재일교포 재벌인 일본 「사카모토」 그루읍의 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피해 파급을 빼놓을 수 없다. 7월 20일 「사카모토」 씨가 국내 투자업체인 방림 및 윤성 방적의 투자분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전해짐으로

써 표면화된 「사카모토」 사건은 **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모국 투자를 했던 재일교포가 사리만을 내세워 모국 철수를 들고나왔다는 점에서 기업인의 윤리 문제를 생각케 했다.**

한편 「제주도 재벌들, 명승지 사들여」라는 제목의 1974년 7월 13일자 『경향신문』 기사와 「제주도 땅 매입에 들뜬 재벌 교포」라는 제목의 1974년 7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 등은 이 시기 제주도에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국내 재벌과 재일교포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들을 "가난한 주민들"의 처지를 생각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투기꾼'의 이미지로 표상하고 있다. 1974년 7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 때문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도에 국내 재벌과 재일교포 등 외지 사람들이 날로 진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 **공해 없고 풍광 좋은 제주 땅은 돈 많은 교포들이 눈독들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71년 가을 교포 김형수 씨가 남제주군 안덕면에 목야지 삼백 ha를 매입, 안덕목장을 조성했고 모 재일교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호겸 씨는 72년 5월 서귀읍 동홍리에 육십사 ha를 사들여 금성목장을 만들어 놨다. 이 외에도 주인이 알려지지 않은 교포들의 소유지가 십여 개 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도에 따르면 이 밖에도 도내 곳곳에 십만~삼십만 평 가량의 목장 예비지를 매입해 둔 국내 재벌 및 재일교포들이 삼십여 명에 달한다는 것. … 제주도 땅을 사놓고 목장이나 농장, 또는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은 그래도 뜻있는 일이나 땅값의 등귀만을 노려 매입해 둔 땅에 철책을 쳐 유휴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 비난도 없지 않다. **가난한 주민들이 그곳에 우거진 풀조차 소에 뜯어 먹일 수 없기 때문.** 외지인의 눈독 속에 제주도의 땅값은 계속 뛰어오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문 기사와 사설 등은 유신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재일교포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었는지 잘 드러내준다. 즉

한편으로는 혈연민족주의 프레임을 통해 기본적으로 모든 재일교포가 '우리'의 일원으로 표상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주의, 문화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 프레임을 통해 조총련과 한청 소속 재일교포,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와 3세 재일교포, "조국의 경제발전"보다 "돈의 생리"를 따르는 재일교포 실업인 등이 '우리'와 다른 '타자'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 특히 1974년 7월 재일교포 재벌 서갑호의 모국 투자 회수 소식과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그리고 일련의 재일교포 간첩 사건 등 재일교포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 시기 신문에 표상된 재일교포의 이미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을 지지하는 간첩," "테러리스트," "민족정신과 주체의식을 상실한 무국적자,"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조국의 경제 발전보다 돈의 생리를 따르는 배신자," "투기꾼"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4. 모국방문 사업 이후 재일교포의 표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재외국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재일교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을 지지하고 반한 활동을 일삼는 조총련 소속이라는 등의 이유로 '조선적' 재일교포의 귀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조선적'을 가진 조총련계 재일교포[31]의 집단적 한국 방문이 공개적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75년 4월 14일부터 약 2주간의 일정으로 가나가와 현(神奈川縣)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16명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1975년 4월 15일 오사카(大阪) 거주 재일교포 30명이, 이어 26일에는 후쿠오카(福岡) 거주 재일교포 91명이 한국을 방문했

31 당시 한국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거부하고 조선적을 유지한 재일교포를 일반적으로 '조총련계 재일교포'로 호칭했다. 이러한 용례를 따라 이하에서도 이들을 조총련계 재일교포로 호칭한다.

고, 6월 들어서 도쿄(東京)에서 14명, 홋카이도(北海道)에서 5명, 오사카에서 다시 30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1975년 들어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모국 방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32]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거류민단 윤달용 단장은 1975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 3주년을 맞아 조총련계 교포들에게도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모국방문'을 환영하며 일시 귀국을 위해 모든 편의와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단중앙본부는 박정희 정권의 지원하에 〈추석 모국방문〉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이 결과 1975년 9월 13일 제1진을 시작으로 약 1,000명의 조총련계 재일교포가 광복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성묘한 후 일본으로 돌아갔다. 특히 방문 기간 중 9월 24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모국방문단 서울시민 환영대회〉에서 희극인 김희갑이 부른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에 눈물바다가 된 이들의 모습은 조총련계 재일교포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며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실례로 「그 많은 재일교포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1975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지난 24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단 환영대회는 한마디로 **겨레의 정과 조국에 개안의 감격이 넘치는 인도주의 승리의 거창한 팡파르**라 할 수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고향 산천의 흙을 만져보고 혈육의 정을 마음껏 누려 30년 동안의 아프고 쓰라린 상처를 달랜 이들 교포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또 한번 감격의 드라머에 흠뻑 젖었던 것이다. 잊었던 애국가를 목이 터져라 외쳐봄은 실로 얼마만인가. 선물로 받은 태극기를 흔들며 불러본 「대한민국 만세」는 두고두고 메아리칠 것이리라. 이제 다시는 조총련에 속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김일성 집단으로 하여금 전쟁 도발을 중지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오라고 절규한 그들의 굳은 결의에서 **조국애의 위대한 힘**을 실감할 수가 있다.

32 「조총련계 사회에 새물결 망향의 한국방문 러시」, 『동아일보』, 1975. 7. 5.

이 외에 이 시기 수많은 신문 기사와 사설들이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의 민족사적 의미와 인도주의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동포의 조국확인」이라는 제목의 1975년 9월 27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이번 재일동포의 추석성묘는 한마디로 **조국 개안의 전기였으며 조국 확인의 행정**이었다. **속임수에 말려 일그러졌던 조국의 허상이 깨어지고 조국의 진상을 눈앞에 마주했을 때** 이미 그들은 음력의 8.15에 새삼 「**제2의 광복**」**을 체험**했던 것이다.
>
> 그들의 눈에서 한결같이 흘러내린 감루는 무엇을 뜻하는가.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이 나의 조국이며 이 겨레가 나의 동족이며 그리고 이 나라가 정통의 한국"이라는 벅찬 확인의 감격이 눈물로 솟은 것이다. 30~40년 동안이나 거리를 두고 떨어졌던 **민족적 일체감의 확인과 국가적 정통성의 확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의 회복이며 또한 **조국의 회복**이기도 했던 것이다. … 그 감회 속에서 조상의 무덤에 절을 올리고 갈려 살던 혈친의 팔목을 마주 잡았을 때 그들의 눈에서 흘러나는 눈물은 **비인도주의의 패배이며 인도주의의 승리** 외에 다름 아니었다.

이처럼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모국방문 사업〉이 1975년 추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문에 표상되는 재일교포의 이미지도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재일교포는 "간첩," "테러리스트," "무국적자," "병신," "배신자," "투기꾼" 등 주로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모국방문 사업을 계기로 신문에 표상된 이들의 이미지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한 핏줄을 나눈 우리 국민"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실례로 「'귀심'의 추석」이라는 제목의 1975년 9월 20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피는 이데올로기보다 진하다"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조총련계 재일교포와 '우리 국민' 사이의 혈연적 동일성이 이념적 차이보다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때마침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이 1천 명이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하여 혈육을 만나고 성묘를 하고 있는 중이라 실향민들의 혈육과 고향에의 정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사실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의 모국방문 추석성묘 실현은 광복 30년 동안에 처음 보는 가장 감격적인 인간 드라머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핏줄의 부름이 「귀심」(歸心)이라는 인간본연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눌렀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주어지는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 인도주의와 인간애의 커다란 승리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돌아가는 재일동포들께」라는 제목의 1975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 사설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성묘를 한 그들의 놀라움과 감격과 웃음과 울음의 사연들이 전해질 때마다 **모국의 동포들은 그들과 정감을 같이했다. 그것은 같은 핏줄의 동포만이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정감이며 혈육의 정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리움과 사무침의 나눔이었다.**

이처럼 재일교포와의 혈연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1976년 1월 구정을 맞아 3천여 명의 재일교포가 모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례로 「진실을 보고 전해달라 구정성묘 재일동포 방문을 환영하면서」라는 제목의 1976년 1월 25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조총련계 동포들은 3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을 조국과 가족 친척들과 단절된 채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이역이 돼버린 일본 땅에서 망향의 쓰라림을 달래면서 살아왔다. … 해방과 함께 북녘 땅에 그 보따리가 펼쳐진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조국을 두 동강으로 분단하고 해외동포 사회까지도 양단하는 비

극을 안겨준 씨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이요, 물**(이데올로기)**보다 진한 피인 혈육의 정이, 동포끼리의 그리움이 그와 같은 인공의 장벽을 언제까지나 바라다만 보고 있을 리는 없었던 것이다.** … 조총련계 동포들의 모국 방문의 실현은 실로 이와 같은 민족의 피의 태동에서 비롯된 너무나도 귀중한 소산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재일동포를 맞는 감회」라는 제목의 1976년 1월 26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0년, 40~50년 만에 만나는 벅찬 감회와 환희가 바야흐로 이 땅 가득히 넘쳐흐르고 있다. 찾아온 사람들이나 맞이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너무나 꿈같은 일이어서 저마다 얼싸안고 할 말을 잊은 채 그저 솟구치는 오열을 삼킬 뿐이다. …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동족 간의 뜨거운 혈육의 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조상, 한 핏줄을 이어받은 같은 동포끼리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모두가 이토록 눈물겹게 반겨하고 가슴 흐뭇해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는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1976년 1월 3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소설가 박기원의 칼럼은 이념적 차이보다 혈연적 동일성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피가 물보다 짙다**」는 말은 흔히 듣고 쓰던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 이토록 우리 모두의 가슴에 공감을 주고 피부에 다가온 적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요새 매일 TV 화면에서 구정 성묘단으로 오는 조연계 재일교포들의 공항 도착 모습을 본다. 그들은 조국 땅을 딛자마자 거의 울음을 터뜨린다. …

피가 피를 부르는 소리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말았다. 이것은 기적적인 사실도 우연도 아니다. 인간의 모습이요, 목소리고 그리고 너무나 자연, 그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주의와 사상은 무색해버렸다.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공산주의자를 안은 것은 아니다. 타향에서 집을 찾아온 아들을 맞**

는 소박하고 진실한 인간의 혈육의 마음만이 있는 것이다. …

우리는 그대들에게 **조국의 모습을, 조국의 냄새를, 그리고 조국의 정**을 그대로 보여주면 될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주의와 사상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절대 가치성을 갖고 있는가를. **주의와 사상으로 콘크리트된 가슴에 피는 뜨겁게 하염없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것으로 이제 억지로 갈려진 남북의 비극의 빙하는 조금은 녹여질 것으로 믿는다.

이후 한식, 단오, 추석 등 민족 명절에 맞춰 대규모의 재일교포 성묘단이 모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들과 '우리 국민' 사이의 혈연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기사와 사설이 신문에 수차례 등장한다. 실례로 「겨레의 핏줄은 끊지 못한다」(1976년 4월 2일자 『동아일보』), 「진한 핏줄 찾아온 재일동포」(1976년 4월 2일 『경향신문』), 「혈육에의 정은 끝이 없다」(1976년 5월 27일자 『경향신문』), 「모국방문사업의 확대」(1977년 4월 1일자 『경향신문』)라는 제목의 사설 등은 "「물보다 진한 피」의 응결력," "혈육의 정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 아무리 두터운 정치 이데올로기의 장벽이라 하더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거역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두꺼운 이데올로기의 장벽이라 하더라도 인도주의와 혈육의 정 앞에는 무력하다"라고 주장하며 재일교포와 '우리 국민' 사이의 혈연적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와 사설들은 이 시기 한국사회가 혈연을 강조하는 혈연민족주의 프레임을 통해 조총련계 재일교포를 "한 핏줄을 나눈 우리 국민"으로 회유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2세와 3세 재일교포를 대하는 한국사회의 인식과 태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세와 3세 재일교포는 주로 "우리말을 잘 못하는," "민족정신과 주체의식을 상실한"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1975년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혈육을 찾아 자발적으로 모국을 방문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실례로 「한식 성묘단 1진 입경 28일까지 9차례 1,500

명 귀국」이라는 제목의 1976년 4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지난해 추석과 올 구정 귀성단에 이어 세 번째로 고국을 방문하는 이번 한식 성묘단에는 **이제까지 모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동포들로부터 조국 발전의 참모습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성묘단에 스스로 끼이기를 자청한 젊은 2세 동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의의가 깊다.**

같은 맥락에서 「재일교포 한식 성묘단 서울의 첫 밤 '조국이 자랑스럽다'」라는 제목의 1976년 4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한 재일교포 2세의 소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감격 속의 첫 밤이었다. 1일 밤 뉴서울 호텔에 여장을 푼 조총련계 재일교포 한식 성묘단은 참으로 오랜만에 가족 친지 등 그리웠던 사람들과 만나 마음껏 회포를 푸느라 밤 가는 줄을 몰랐고 **이국땅에서 태어나 조국을 모르고 자라온 20대 2세들은 비로소 혈육의 뜨거움을 알았다.** … 진영(22, 동경중앙대 2년) 군은 "말로만 들어오던 조국의 품에 안기고 보니 조국의 귀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며 "일본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이 발전한 조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단오절 모국방문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1977년 6월 14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재일교포 2세의 모국방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조총련 측의 회유, 협박, 테러, 납치 등 갖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국을 찾는 동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혈육의 정」의 강한 응결력을 실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단오절 모국방문단은 대부분 **젊은 제2세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들은 그동안 모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제1세 동포들로부터 조총련 측의 거짓

선전과는 다른 조국의 참모습을 직접 전해 듣고 **자발적으로 고국 땅을 찾게 된 젊은 세대**들인 것이다.

이처럼 혈연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더불어 이 시기 한국사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우한 재일교포"를 도와야 한다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권혁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 시기, 특히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사회는 재일교포를 주로 "잘사는 선진국 주민," "경제발전에 필요한 돈줄," "부자" 등의 이미지로 표상하며 이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당연시했다.[33] 또한 모국을 방문한 재일교포들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내용을 전하는 신문 기사들은 이러한 "부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34] 그러나 1975년 12월 이북5도민회와 한국신문협회 주도로 〈불우 재일교포 모국방문 돕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불우한 재일교포"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한국사회에 등장했다. 이러한 이미지가 등장한 계기는 이북5도민회가 〈불우 재일교포 돕기 모금운동〉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이북5도민회서 모금운동 조총련 모국방문은 민족재결합의 시발」이라는 제목의 1975년 12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북5도민연합회(대표의장 임종협)는 6일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의 모국방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 장벽을 풀어주기 위해** 각 지방 산하기구를 총동원 모금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 이북5도민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초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이 민족재결합 운동이며 궁극적으로 통일 달성을 촉진시키는 길"

33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256쪽.

34 실례로 『동아일보』 「휴지통」란에 실린 가십 기사(1973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오아시스」란에 실린 사고(1973년 7월 14일자), 「일 실업인 불우 소년에 성금」(1973년 11월 17일자 『경향신문』), 「일본 사람들에 지지 않겠습니다」(1974년 5월 17일자 『경향신문』), 「재일교포 기증 장학금 백만원 고려대에 전달」(1974년 8월 2일자 『동아일보』), 「재일교포 두 어린이 불우 학생돕기 성금 박대통령에게 전달」(1974년 10월 2일자 『경향신문』), 「성금 백만원 기탁 전 조총련계 교포」(1975년 9월 22일자 『경향신문』), 「현해탄 넘어온 이웃돕기 온정 교포 김형철씨 2백만원 본사에」(1975년 11월 6일자 『경향신문』)라는 제목의 기사 등이 재일교포의 성금 기탁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조총련은 위협과 공갈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심지어 5~6만 원이라는 조총련계 신용조합에서 얻어 쓴 대부금에 묶여 많은 동포들이 모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우 재일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신문협회가 〈불우 재일교포 모국방문 돕기 운동〉을 이북5도민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불우한 재일교포"라는 이미지는 신문 지면을 통해 한국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실례로 「불우 재일교포 모국방문 돕기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실린 1975년 12월 9일자 사고(社告)는 다음과 같이 모금운동에 대해 광고하며 '우리'가 "불우한 재일교포"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추석 이후 지금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로이 다녀갔습니다. … 그러나 몽매에도 그리는 조국 부모 형제자매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재일동포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불우하여 모국을 찾지 못하는 동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신문협회에서는 불우 재일동포 모국방문 돕기 운동을 불우 이웃돕기 운동과 함께 전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우한 처지를 국내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감싸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불우 재일동포 모국방문 돕자」라는 제목의 1975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에는 경제적으로 불우하여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모국을 찾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동포들도 없지 않다. … 그리고 일본에 친척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형제들을 그리워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불우하여 모국을 방문할 수 없는 동포들이 많은 형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본에 있는 친척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족재결합의 본보기인 재일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 추진 사업에 온 국

민의 적극적인 참가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외에도 「불우 조총련계 동포 모국방문 돕기 열기 가득 실향민들이 모금 앞장」이라는 제목의 1975년 12월 10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비롯하여 1976년 2월 초 모금운동 마감하기 이전까지 약 두 달간 수십 편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와 사고가 매일 〈불우 재일교포 돕기 모금운동〉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재일교포를 "돈의 생리"를 따르는 "부자"로 표상하던 이전의 흐름과 달리 이들 가운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를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경제적으로 불우한 재일교포"로 표상하며 재일교포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했다.

5. 결론

지금까지 이 글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사를 분석하면서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 시기 재일교포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 재일교포는 재외국민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혈연민족주의 프레임하에 "한 핏줄의 한 겨레"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1970년대 중반까지는 박정희 정권 시기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작동한 반공주의, 문화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의 프레임하에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과 한청 소속 재일교포,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와 3세 재일교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재일교포 실업인 등이 주로 "북한을 지지하는 간첩," "테러리스트," "민족정신과 주체의식을 상실한 무국적자,"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조국의 경제 발전보다 돈의 생리를 따르는 배신자," "투기꾼"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되며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특히 1974년 7월 재일교포 재벌 서갑호 씨의 모국 투자 회수 소식과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그리고 일련의 재일교포 간첩 사건 등

재일교포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재일교포의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1975년 9월부터 시작한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을 계기로 재일교포의 이미지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반공주의 프레임하에 재일교포, 특히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계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표상하며 이념적 차이를 강조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와 재일교포 사이의 혈연적 동일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한 핏줄을 나눈 우리 국민"으로 표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 신문 지면에 자주 등장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표현은 혈연민족주의 프레임을 통해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계" 동포들을 포섭하고 회유하고자 하는 당시 한국사회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의식구조와 태도가 일본화"한 2세와 3세 재일교포를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하며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던 경향 또한 점차 "혈육의 정을 찾아 자발적으로 모국을 방문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일교포를 "돈의 생리를 쫓는 배신자," "투기꾼"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하며 배제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불우한 재일교포"라는 이미지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을 계기로 재일교포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룩한 경제적 성취를 기반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과 한국사회가 남북관계는 물론 재일교포를 대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35] 즉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섰다는 자신감, 일본 내 조총련과 민단 사이의 경쟁에서도 우위에 섰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재일교포를 대하는 데 있어

35 "선의의 경쟁,"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 구상을 밝힌 1970년의 8·15선언, 대공산권 문호개방을 천명한 1973년의 6·23선언, 1974년 9월 1일 대공산권 우편물 교환업무 개시 등이 이러한 자신감을 나타낸 실례들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동포방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과거와 달리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다. 실례로 「조총련계 사회에 새물결 망향의 한국방문 러시」라는 제목의 1975년 7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모국방문 추진은 "그들을 대함에 있어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재일교포 사회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 **조총련계 교포의 한국 방문 추진은 그들을 대함에 있어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민단의 한 간부는 조총련계 교포를 한국에 보내면 그중에 간첩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갔다 와서 더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조총련과 북괴의 선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 만큼 그것만으로도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 대통령 통일원 지시 내용」이라는 제목의 1976년 2월 11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 또한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우리의 국력이 커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 … 남북 관계를 기본적으로 대결로 파악하고 있는 통일원의 판단은 옳다고 본다. 결국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어느 편이 우월한 힘을 갖느냐가 남북관계의 장래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왔는데 그 동기도 결국 우리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직접 와서 보고 그들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방송에서 그들이 대담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동안 우리의 홍보가 많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 와서 보니까 우리의 국력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같다.**

요컨대 위의 논의는 이 시기 한국사회가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성

장을 통해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1975년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 이후 재일교포를 부정적 이미지로 표상하며 타자화하고 배제하던 이전의 경향에서 벗어나 이들을 "한 핏줄의 우리 국민"으로 적극 포섭하고 회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위의 논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혈연민족주의 프레임이 이전 시기 반공주의, 문화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 프레임이 재일교포를 배제하기 위해 강조한 이념적·문화적·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어 재일교포를 '우리 국민'을 포섭하고 회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계획임을 밝혀둔다.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홍선영, 「1920년대 일본 문화주의의 조선 수용과 그 파장」, 『일어일문학연구』 제55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05.
鈴木貞美, 『生命で読む日本近代: 大正生命主義の誕生と展開』, NHK BOOKS, 1996.
渡部政盛, 『新カント派の哲學とその教育學說』, 啓文社書店, 1924.
稻毛詛風, 『オイケンの哲學』, 大同館書店, 1913.
林正子, 「『太陽』における金子筑水の〈新理想主義〉: ドイツ思想 · 文化受容と近代日本精神論」, 『日本研究』 19,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1999.
生田長江, 『生田長江全集(第1卷)』, 大東出版社, 1936.
生田長江 · 中澤臨川, 『近代思想十六講』, 新潮社, 1915.
オイケン · ルドルフ, 波多野精一 · 宮本和吉 譯, 『新理想主義の哲學』, 內田老鶴圃, 1913.
オイケン · ルドルフ, 得能文 譯, 『精神生活の哲學』, 弘道館, 1914.
オイケン · ルドルフ, 三竝良 譯, 『人生の意義と價値』, 大同館, 1914.

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표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김범수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 왔는가」, 『역사비평』 78호, 2007.
김동노,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111호, 2010.
김범수, 「박정희 정권 시기 '국민'의 경계와 재일교포: 5 · 16 쿠데타 이후 10월 유신 이전까지 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6집 2호, 2016.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2006.
김봉섭, 「한국 재외동포 정책 10년의 회고와 전망: 연구사 전개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37호, 2009.
김세중, 「박정희의 통치이념과 민족주의」, 『한국현대사연구』 제8권, 1996.
왕혜숙 · 김준수, 「한국의 발전국가와 정체성의 정치: 박정희 시기 재일교포 기업인들의 민족주의 담론과 인정 투쟁」, 『경제와 사회』 제107호, 2015, 가을호.
이성, 「한일회담으로 보는 박정희 정권의 재일동포 정책: 귀화와 영주권을 중심으로」, 『사림』 제33호, 2009.
이용재,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과정과 과제」, 『민족연구』 61권, 2015.
이종훈, 「재외한인정책의 역사와 전개: 해방에서 참여정부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임현진 · 송호근, 「박정희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조경희, 「한국사회의 '재일조선인' 인식」, 『황해문화』 57호, 2007.
仲原良二, 『在日韓國 · 朝鮮人の就職差別と國籍條項』, 明石書店, 1993.
Kim, Bumsoo, "From Exclusion to Inclusion? The Legal Treatment of 'Foreigners' in Contemporary Japan," *Immigrants and Minorities* 24(1), 2006.

연구논단

오이켄(R. Eucken)의 '신이상주의' 수용과 한일 '문화주의'의 전개 양상: 이쿠다 조코(生田長江)와 노자영(盧子泳)을 중심으로 | 최호영

투고일자: 2017. 4. 29 | 심사완료일자: 2017. 5. 23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이 글은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통해 한일 근대문학에서 '문화주의'가 전개되어간 양상을 살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쓰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1차대전 이후 종래의 사회진화론을 반성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에 등장한 문화주의를 비교하는 가운데 양자의 성격을 대체로 '개인'과 '민족'의 층위로 이분화시켜왔다. 이 글에서는 오이켄을 매개로 한 이쿠다 조코와 노자영의 '신이상주의' 수용 양상을 추적해봄으로써 양자의 접점과 함께 조선의 '문화주의'에 내재한 독특한 지점을 밝히고자 했다. 1920년대 조선에서 노자영은 이쿠다 조코를 통해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접했다. 이쿠다 조코는 기존의 사회진화론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접했으며 세계와 인간, 객관과 주관을 조화시키는 정신생활을 통해 세계라는 보편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가 특히 동서사상을 종합적으로 섭취하는 인격 활동을 통해 정신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던 것은 이른바 '다이쇼 교양주의'의 이상과 일치한다. 이쿠다 조코를 경유하여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수용한 노자영 또한 세계적 보편성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노자영은 여기서 나아가 세계적 보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전통'을 발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격 활동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쿠다 조코가 오이켄의 신이상주의를 수용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표방하기 위한 '교양주의'를 지향하려 했다면, 노자영은 세계의 보편성을 향해 조선적 특수성을 발휘하기 위한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오이켄(R. Eucken), 신이상주의, 문화주의, 이쿠다 조코(生田長江), 다이쇼 교양주의, 노자영, 전통, 공동체

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표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김범수

투고일자: 2017. 4. 30 | 심사완료일자: 2017. 5. 19 | 게재확정일자: 2017. 8. 8

이 글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 시기에 초점을 맞춰 재일교포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972년 10월 1일부터 1979년 10월 3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의 통치 이념으로 작동한 반공주의, 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의 프레임하에 재일교포가 한편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는 간첩,"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조국의 경제발전보다 돈의 생리를 따르는 배신자" 등 부정적 이미지의 "타자"(Others)로 표상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 국민"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표상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재일교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1975년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을 계기로 이들을 타자화하고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들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적극 포섭하고 회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제어: 박정희, 재일교포, 반공주의, 민족주의, 경제개발주의, 포섭과 배제

exhibiting the uniqueness of Chosŏn.

• **Keywords:** R. Eucken, neo-idealism, culturalism, Ikuta Chōkō, *Taishō culturalism (Taishō kyōyōshugi)*, Noh Ja-Young, tradition, communitarianism

Are *Chaeilgyop'o* Really "Korean"?: An Analysis of *Chaeilgyop'o*'s Images Represented in Daily Newspapers in the 1970s | Kim Bumsoo

Focusing on the Park Chung-Hee era after the October *Yusin* (1972), this paper examines how the images of *Chaeilgyop'o* (ethnic Koreans in Japan) were represented in daily newspapers in the 1970s. Specifically, by analyzing newspaper articles from *Kyunghyangshinmun*, *Dongailbo*, and *Chosunilbo*, three major newspapers of Korea, from October 1, 1972 to October 31, 1979, this paper first shows that, on the basis of anticommunism, cultural nation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alism, negative images were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groups of *Chaeilgyop'o*: 1) the *choch'ongryŏn Chaeilgyop'o* who supported North Korean regime, 2)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Chaeilgyop'o* who were not good at speaking Korean, and 3) the *Chaeilgyop'o* entrepreneurs who pursued their own private interests rather than national interests. At the same time, this paper also shows that, on the basis of blood nationalism, *Chaeilgyop'o* were represented as "our co-nationals who share the same bloodline" in the view of Korean media. In doing so,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with the launching of "Visiting the Motherland" program in September 1975, which allowed *choch'ongryŏn Chaeilgyop'o* to visit South Korea without any preconditions, the images of *Chaeilgyop'o* represented in daily newspapers changed from negative ones to positive ones, and such change implies that the South Korean society had changed its attitudes toward *Chaeilgyop'o* from exclusion to inclusion.

• **Keywords:** Park Chung-Hee, *Chaeilgyop'o* (ethnic Koreans in Japan), anticommunism, nationalism, economic developmentalism, inclusion and exclusion